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격과 전망

김경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I. 서론

2015년 1월 1일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¹⁾)가 정식 출범한다. 2014년 5월 2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창설조약이 체결됐으며 2014년 10월 10일 아르메니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조약에 서명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2년 형성된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3국 단일 경제권(Single Economic Space, SES)의 발전된 형태로, 1억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단일 시장을 형성하게 되며 연합회원국 간 상품 및 서비스, 자본, 노동 등의 네 가지 자유의 자유로운 이동 및 주요부문 정책의 공동 조정과 초국가기관의 설립 등 높은 수준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국민경제예측연구소의 소장 Alexander Shirov는 “세 국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집중해 하나의 산업과 경제뿐만 아니라 하나의 금융정책을 형성하는 것”²⁾이라 평가했다. 이외에도 키르기스스탄이 오는 12월 23일 낮은 통합단계인 관세동맹에 우선 가입할 예정이다.³⁾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에 대한 서방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서방은 “소련의 부활”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 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 궁극적으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EAU)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손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미국 PBS방송에 출연해 “푸틴은 소련 붕괴를 끔찍한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도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다”, “(이런 의심의 근거는) 거기에서 시작한다.”며 미국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을 소련의 부활을 노리는 정치적 야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크림지역 병합은 서방과의 갈등을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었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소련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모든 회원국은 러시아계 국민이 존재하고 있어 러시아의 이러한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 역시 “단순히 단일 경제시장 형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독립주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1)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사이트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을 EAEU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을 기존에 사용되던 EEU가 아닌 EAEU로 표기함

2) Rianovosti, 2014년 5월 29일. <http://ria.ru/politics/20140529/109870952.html>

3) Vecherni Bishkek. 2014년 11월 14일.

http://www.vb.kg/doc/292765_dogovor_o_prisoedinenii_k_tamojennomy_souzy_podpishyt_23_dekabria.html

독립 없이 어떻게 정치적 독립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경제권 통합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⁴⁾

창설 이전부터 나오는 이러한 서방의 시선에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국가를 러시아의 영향력에 종속시켜 소련이나 제국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편견 없이 조약을 보고 판단하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⁵⁾ 창설협정 체결 이후 협정서는 각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 서로간의 오해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을 설명했으며 미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라시아경제연합을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처음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라는 경제 협력기구로 시작해 현재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유럽연합으로 발전하였고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런 유럽연합을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유라시아지역에서 이러한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을 창설해 독립국 간 경제 협력을 시도하여 왔었다. 다만 당시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최악에 직면해 있었으며 러시아 역시 다를 바 없었기에 경제통합을 주도할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라시아연합의 구상 역시 1994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의해 제안됐지만 이뤄지진 못했다.⁶⁾ 90년대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혼란했던 것과 다르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내부도 비교적 안정화 되었다. 이로써 러시아는 다시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갔고,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를 설립했다. 이후 유라시아경제공동체는 관세동맹으로 확대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제도적, 경제적 성격을 규명하고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사례를 비교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효과와 통합 및 발전가능성 등 향후 전망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II.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격

1. 유라시아 지역 내 통합 기구

소련의 붕괴 후 유라시아 지역에서는 소련 독립국들이 주체가 된 많은 지역기구가 생겨났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앞서 설명한 독립국가연합으로, 1991년 소비에트연방주체 중 발트 3국과 조지아를 제외한 11개국으로 창설된 조직체였다. 독립국가연합은 정치 군사적인 부분보다 경제유대를 강화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기구이다.⁷⁾ 하지만 시장경제도입으로 인한 초기 경제 불

5) Rianovosti. 2014년 5월 24일. <http://ria.ru/politics/20140524/1009172809.html>

6) The telegraph. 2011년 10월 6일.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kazakhstan/8808500/Kazakhstan-welcomes-Putins-Eurasian-Union-concept.html>

7) 1993년 조지아가 가입하지만,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후 탈퇴한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역시 탈퇴를 선언하며 현재는 9개국만 남은 상태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옵서버 자격으로 남아있다.

안정으로 상호간 협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로 인한 경제주권 침탈을 우려해 경제통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FTA와 관세동맹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FTA는 러시아 이익에만 집중한 러시아 의회의 비준 거부로 결렬되었고⁸⁾, 관세동맹 역시 1995년부터 체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실제로 창설되진 못했다. 독립국가연합 간 FTA 역시 협의만 있었을 뿐 실제로 발효되지 못하다 2011년이 되서야 발효될 수 있었다. <표 1>은 지지부진 했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관세동맹 추진 과정을 보여준다.

<표 1> 러-벨-카 관세동맹 추진과정

날짜	내용
1995년 01월 06일	러시아, 벨라루스 관세동맹 협정 체결
01월 20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자 관세동맹 체결 협의
1996년 03월 29일	키르기스, 관세동맹 협정 가입
1999년 02월 26일	타지키스탄, 관세동맹 협정 가입
2000년 10월 10일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립조약 서명
2001년 05월 30일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발효
2006년 08월 16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 설립 결정
2007년 10월 06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창설위원회 설립, 단일관세구역 및 관세동맹 창설 조약 체결
2008년 01월 25일	3국간 역내 관세율 조정 합의
2009년 11월 27일	단일 관세법 채택, 관세동맹 시행합의
2010년 07월 06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관세법 발효

출처,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위원회(Комисс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1992년에는 독립국가연합 집단안보조약이 체결된다. 집단안보조약은 안보협력기구로서 독립국가연합 6개국(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체결해 설립되었으며, 이듬해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가 가입했다. 이후 2002년 세 국가가(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연장협약을 거부하며 탈퇴했고, 이후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로 발전된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지역 내 국제테러, 조직범죄, 마약, 인신매매,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로, 국제연합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속대응군이 존재한다.

2001년에는 기존에 있던 상하이-5(중국, 러시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이 정식가입하게 되면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가 창설된다. 상하이협력기구의 목적은 3대약(종교적극단주의, 분리주의, 국제테러)의 척결과 국경확정, 상호군사적 신뢰를 위해 창설되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많은 교류를 했으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 9월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회원국 신청을 했으며, 중국은 인도의 정식회원국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태도이다. 또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며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만을 위한 경제지원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푸틴 역시 상하이협력기구의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하이협력기구의 주요 국가인 중국이 ‘신 실크로드’구상을 하고 있어 이는 추후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8) 처음 CIS FTA에 관한 조약이 체결 된 것은 94년 이지만 러시아 의회의 비준 거부로 효력이 상실됐다.

2000년대에 들어 러시아는 다시 독립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고유가를 통한 경제 성장과 내부적 안정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2000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통합이 시작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통해 독립국가 간 경제통합을 추진했으며 독립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였다. <표 1>과 같이 2000년대 중반이 되어 경제협력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2010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국 관세동맹이 시행된다. 이후 2011년 유라시아경제통합을 위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조약이 체결되고, 최고 유라시아경제회의가 발족된다. 2012년 최고 유라시아경제회의의 결정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초가 되는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SEC)⁹⁾이 발효된다. 단일경제공간은 회원국 간 “네 가지 자유” 상품, 자본, 서비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정책의 공동조정을 보장한다. 유라시아 내 지역기구는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며 정리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지역기구의 난립은 자칫하면 스파게티 볼 현상(Spaghetti Bowl Effect)을 일으킬 수 있다. 스파게티 볼 현상은 스파게티 가락들이 볼 안에서 서로 복잡하게 엉킨 모습과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별명으로, 많은 지역기구의 창설로 오히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생겨 통합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라시아에는 많은 기구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그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스파게티 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유라시아국가들이 어느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국가들이 각각 가입한 기구가 다르며 중복 가입된 경우가 많아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2> CIS 지역 내 주요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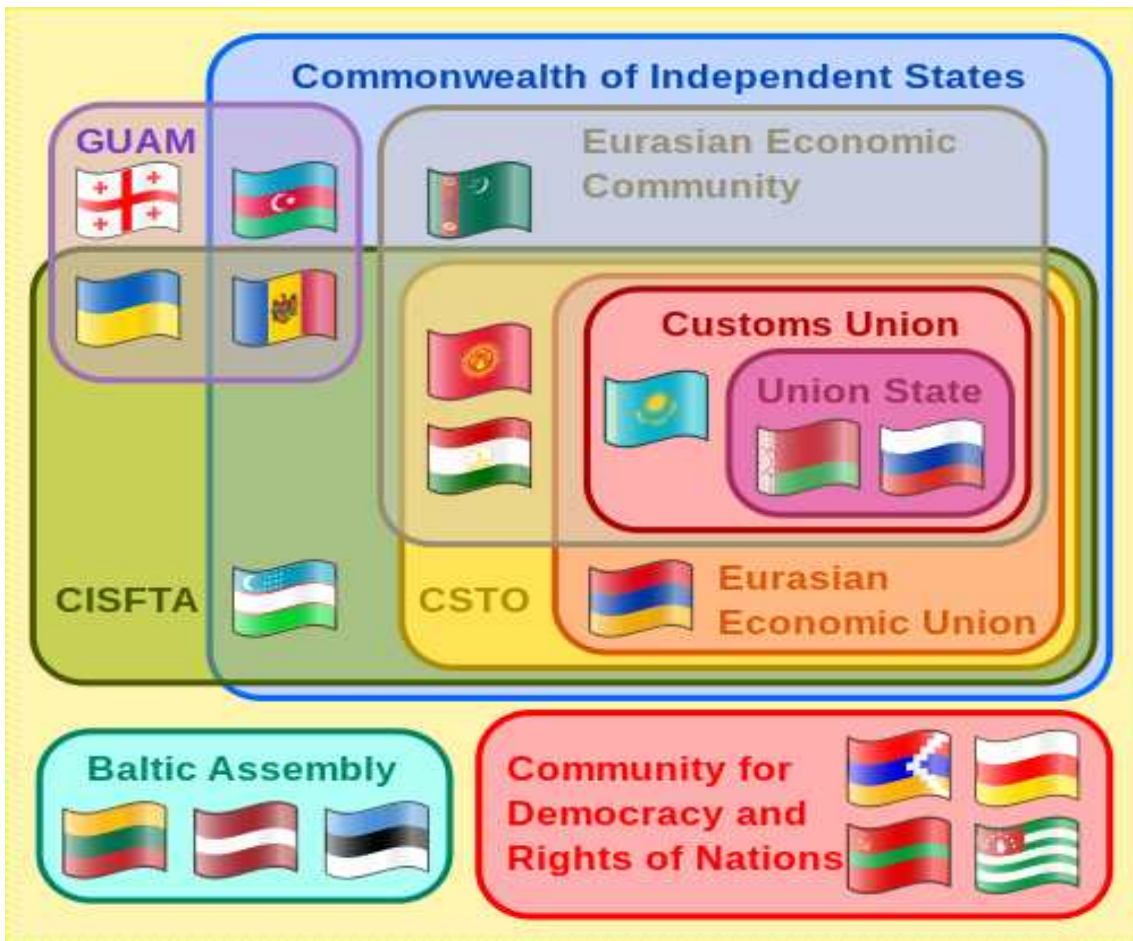
명칭	참가국	창설시기	주요 목적
독립국가연합 (CIS)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1991년 12월	포스트 소비에트 정치경제 공동체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1992년 5월	국경관리 대테러 조직범죄 마약퇴치
GUAM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1997년 10월	러시아에 대한 경계 및 유럽과의 협력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000년 10월	경제통합, 사회보장
상하이협력기구 SCO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01년 6월	국경확정, 대테러

9) 단일경제공간은 Single Economic Space(SES) 혹은 Common Economic Space(CES)로 혼용되고 있으나 러시아어로 Еди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로 표기하고 있으며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발간자료에서 단일경제공간을 SES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SES로 표기함

러시아·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0년 7월	회원국 간 경제교류
단일경제공간 SES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2012년 9월	공동경제 정책 및 자본, 상품, 서비스, 인적 교류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2015년 1월 (예정)	초국가적기구를 통한 경제적 통합

출처, 각 기구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

<그림 1> 국가별 가입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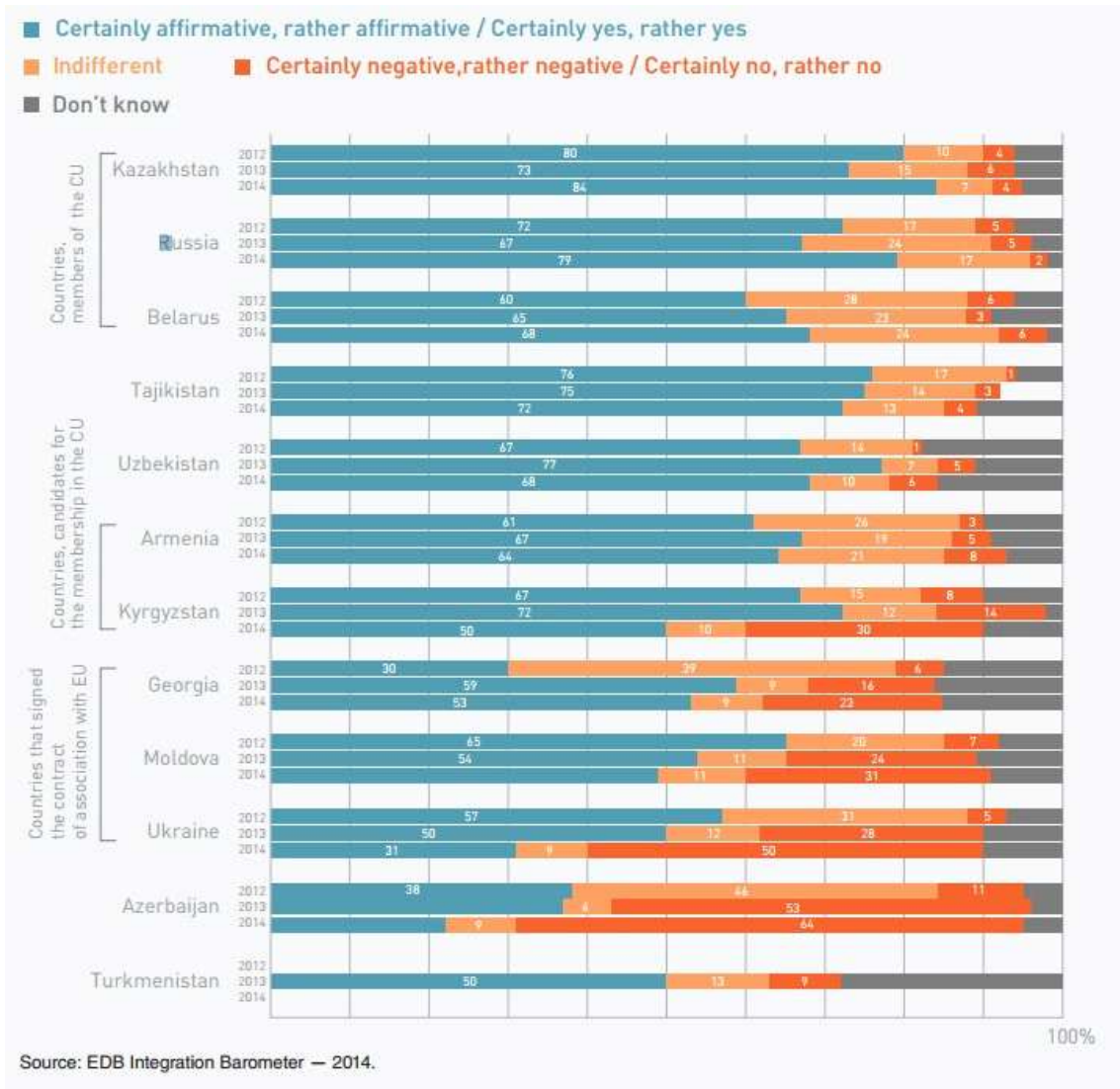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Евразийский_экономический_союз

2.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국가들의 통합 바로미터

유라시아개발은행(Eurasian Development Bank, EDB)은 2012년부터 유라시아개발은행 통합 바로미터(EDB Integration Barometer)를 발간하고 있다. 통합 바로미터는 각 국가 국민을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통계를 내고 있다. <그림 2>는 관세동맹에 대한 질문이다. 관세동맹 가입국가의 경우 관세동맹에 대한 평가이고, 비가입국가의 경우 가입을 희

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림 2〉 관세동맹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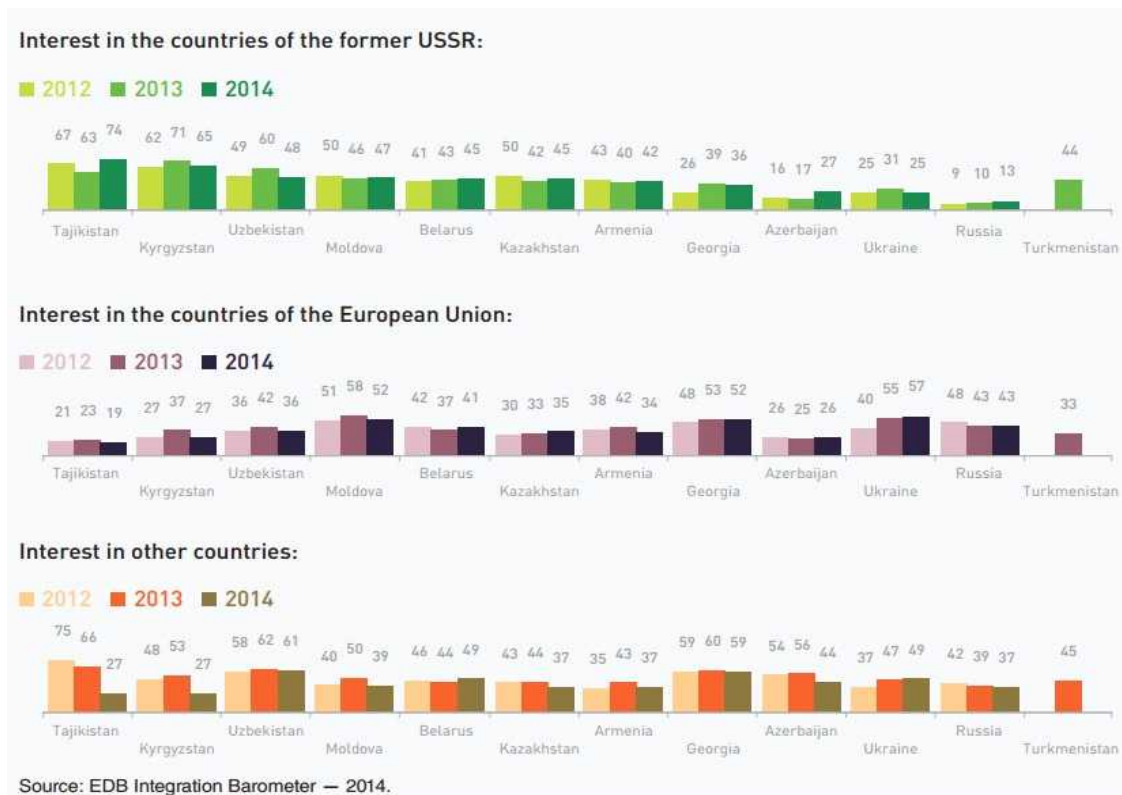


통합 바로미터의 결과는 흥미롭다. 관세동맹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카자흐스탄이었다. 또한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로 나타났다. 두 국가의 경우 러시아와 직접적인 분쟁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2012년, 2013년 결과에서 절반 이상이 찬성했던 것과 다르게 2014년에 급격히 줄어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아르메니아와의 영토분쟁에서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지원한 것으로 인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월 23일 관세동맹 협정이 예정된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역시 관세동맹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향후 별다른 반감 없이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을 받아들일만한 국가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느 국가의 투자와 자본의 유입 및 협력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

바, 조지아의 경우 당연하게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그림 3>을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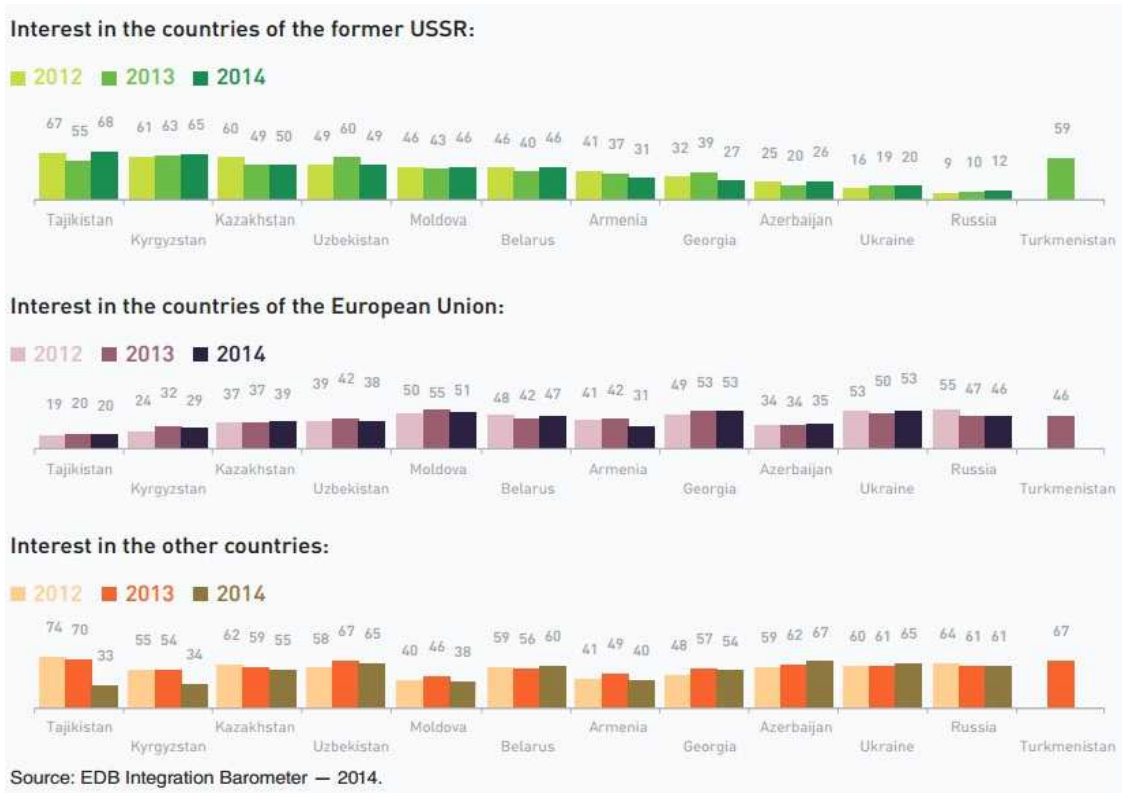
<그림 3> 투자와 자본의 유입 및 협력 선호국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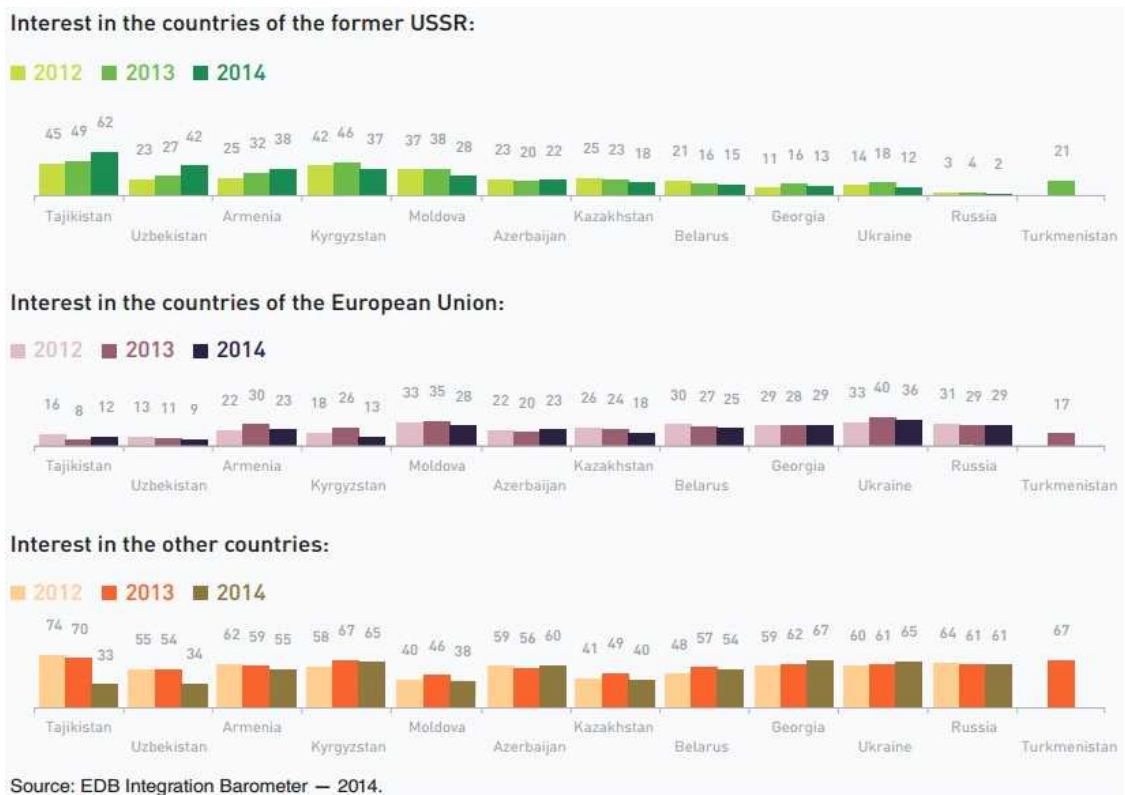
러시아의 경우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의 투자와 자본의 유입, 협력에 대해 제일 긍정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럽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원하는 국가들은 주로 중앙아시아국가들로 나타났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가입하거나, 가입예정 국가가 많다는 것은 이러한 인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0)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 유럽연합, 기타국가 세 가지이다.

〈그림 4〉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개발 선호국가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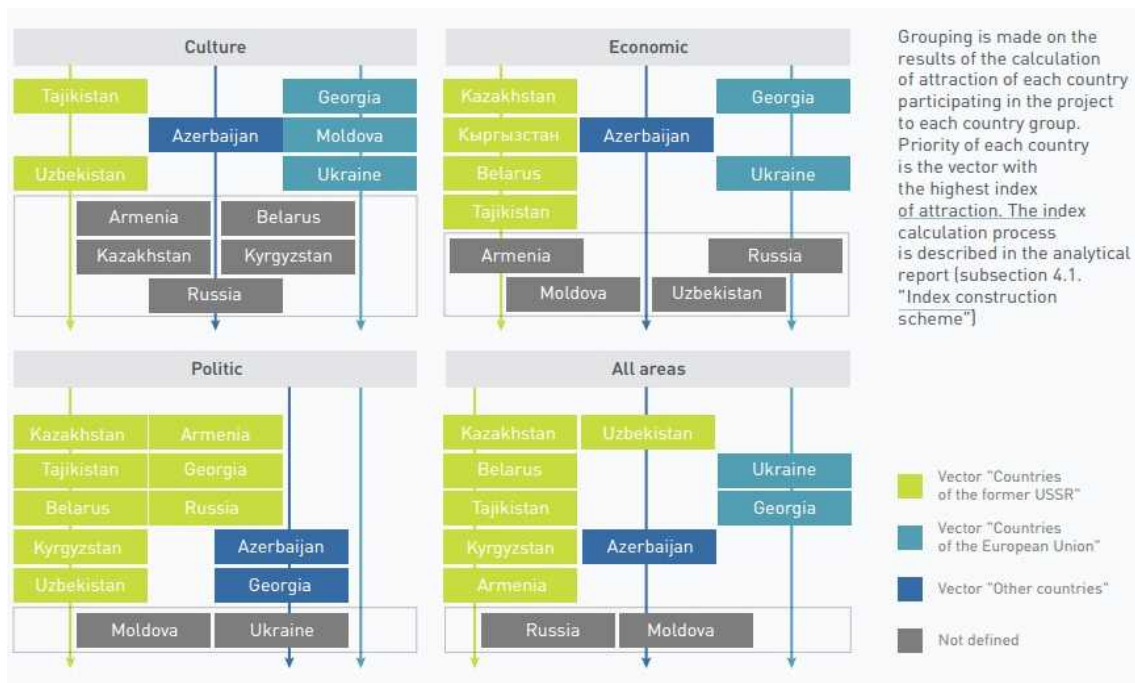


〈그림 5〉 노동 희망 국가군



〈그림 4〉와 같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개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 러시아는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중앙아시아 국가들만이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로 가장 높은 응답은 기타 국가에서 나타났다. 통합 바로미터에 따르면 각 국가들이 원하는 국가들은 상이했다. 러시아의 경우 일본과의 협력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조지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미국을 선호했다. 유럽과의 협력은 역시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5〉은 노동 희망 국가군이다. 노동에 있어선 유럽연합의 선호도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기타 국가에서의 노동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 아닌 이주희망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은 보여준 국가들은 아제르바이잔(84%), 러시아(75%), 우즈베키스탄(74%)로 나타났다.

〈그림 6〉 우선순위에 따른 국가별 성향



출처, EDB Integration Barometer 2014

이외에도 문화, 경제, 정치 등의 분야에서 각 국가별 선호도를 종합하여 각 국가들의 선호도를 〈그림 6〉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국가들은 특히 정치부분에 있어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수장국인 러시아가 가장 포스트 소비에트 지향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2013년 자료에서 러시아는 오히려 유럽연합 지향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결과는 러시아의 크림병합 이후 유럽연합 및 미국과 대립하게 되면서 유럽연합 지향적인 성향이 줄어든 결과로 생각된다.

3. 경제통합의 단계

발라사(Bela Balasa)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관세동맹(Custom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등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자유무역지대는 가맹국 간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관세와 수량에 대한 규정을 철폐한다. 하지만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별도의 관세와 규정을 부과하는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이다. 대표적인 예로 NAFTA와 같은 FTA를 들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체결되고 있는 많은 경제통합은 거의 FTA에 속하고 있다.¹¹⁾ 두 번째 단계인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대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단계로 역외 국가에 대한 공통관세를 부과한다. 대표적인 관세동맹으로 유럽경제공동체나 리·벨·카 관세동맹을 들 수 있다. 세 번째인 공동시장 단계는 관세동맹에서 더 나아가 인력과 자본,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단계이다. 즉 노동이나, 자본, 기술 등이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같은 나라의 시장처럼 왕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를 들 수 있다. 네 번째 경제동맹은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과 함께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과 협력의 단계로 경제정책의 상호협조성을 지니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완전경제통합은 경제정책 조정에서 더 나아가 회원국 간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통합된 중앙은행과 공동의회 등 초국가적기구가 설립되어 회원국들의 사회와 경제가 통합된다. 대표적인 예로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사용하며 각료이사회,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져 있어 가장 모범적인 완전경제통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통합의 단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라시아의 경제통합은 단일경제공간을 통해 이미 경제동맹의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단일경제공간의 조약 내용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단일경제공간은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당사국의 영토에서 통일된 경제정책과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단일경제공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실효성 있는 작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경제적 구조안정과 안정적인 발전 도모

재정, 통화, 금융, 무역, 통관 및 관세 정책의 조정 및 구현

통합운송 및 에너지, 정보시스템 개발

경제, 산업, 과학 및 기술협력 등의 우선순위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의 통일된 체계 구축

회원국은 기본 방향과 당사국 경제구조 조정의 단계, 생산능력의 효율적인 사용 보장,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 고효율 생산을 위한 지원과 독점방지에 대한 합의, 재정 및 금융정책, 단일경제공간 내에서 공정한 경쟁 조건의 생성에 대해 동의한다.

11) 2014년 10월 현재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건수는 총 393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는 22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FTA는 지역무역협정에서 가장 많은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동맹은 25건 6%에 불과했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절반이상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한 필요조건과 우선순위 분야 및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전환과 보호기업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회원국은 상호 시장접근에서 내국인대우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기업과 개인의 참여를 위해 단일경제공간 틀 내에서 점진적으로 국내 서비스시장에서의 기존의 제한을 제거한다.

회원국 국민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고용과 임금, 노동 및 고용의 기타 조건에서 통합된 법적 제도의 생성과 단일경제공간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한다.

회원국은 외환정책에서 타국 통화 사용제한의 해제, 단일환율 도입, 국내시장 비거주자에 대한 은혜의 허가, 허가은행의 현지통화 수출입 제한 폐지 등의 점진적인 자유화를 해야 한다.

출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

단일경제공간은 현장에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교류 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법적제도의 통합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단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단일경제공간은 이미 경제동맹의 단계와 일치된다. 즉 관세동맹 국가들은 공동시장 단계와 경제동맹단계를 동시에 이루었으며 오는 2015년 1월 1일 창설될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경제동맹의 단계를 넘어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경제통합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주권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통화의 단일화와 초국가적기구의 설립 및 효과적인 운용에 있다. 하지만 2005년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의 틀에서 시도된 양국 간 단일통화화가 좌절된 사례를 볼 때 매우 힘든 과정일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경제 및 금융정책 협의회장 Timur Suleimenov는 “단일통화는 우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수준의 금융통합이다.”라고 밝혔다.¹²⁾ 또한 오는 10월 아르메니아가 가입함에 따라 국가 간 경제격차로 인해 근시일내에 단일통화 도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유라시아 지역 연도별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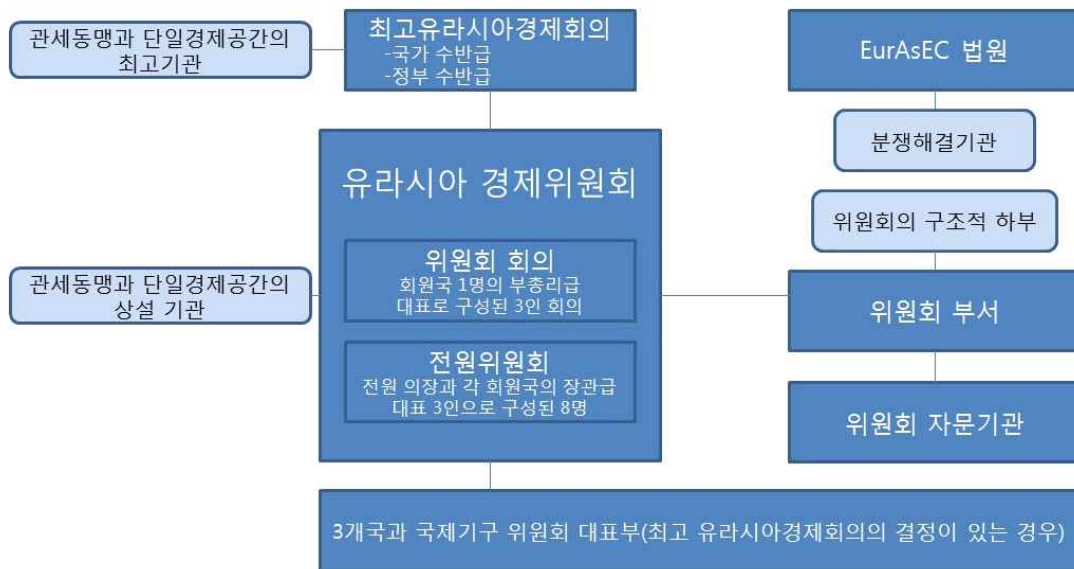
출처, https://ru.wikipedia.org/wiki/Евразийский_экономический_союз

12) Eurasiancenter. 2014년 10월 29일.
<http://eurasiancenter.ru/expert/20141029/1003739672.html>

3.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기구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선 유라시아경제연합 기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는 2014년 10월 10일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경제공동체 국가간협의회 회의에서 회원국 국가정상들은 2012년 12월 회의의 내용대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폐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성과들과 계약 및 문서의 대부분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이전할 것이라 밝혔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의 통합위원회와 사무국의 실제적인 경험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참가하며,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법원의 권한은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법원으로 이전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내부 기구는 상당부분 유라시아경제공동체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초국가적 기구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2012년 출범시킨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단일경제공간의 주요한 감독기관으로, 다양한 경제활동 분야에 걸쳐 강한 권한을 가진다.¹³⁾ 그 권한은 관세뿐만 아니라 공통의 거시경제, 에너지, 통화정책의 분야에도 미치고, 또한 국가조달이나 노동, 이민 문제도 다루고 있다. 위원회의 핵심은 이사회로 그 구성원은 3개국의 부총리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각국에서 선출된 3명의 위원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구조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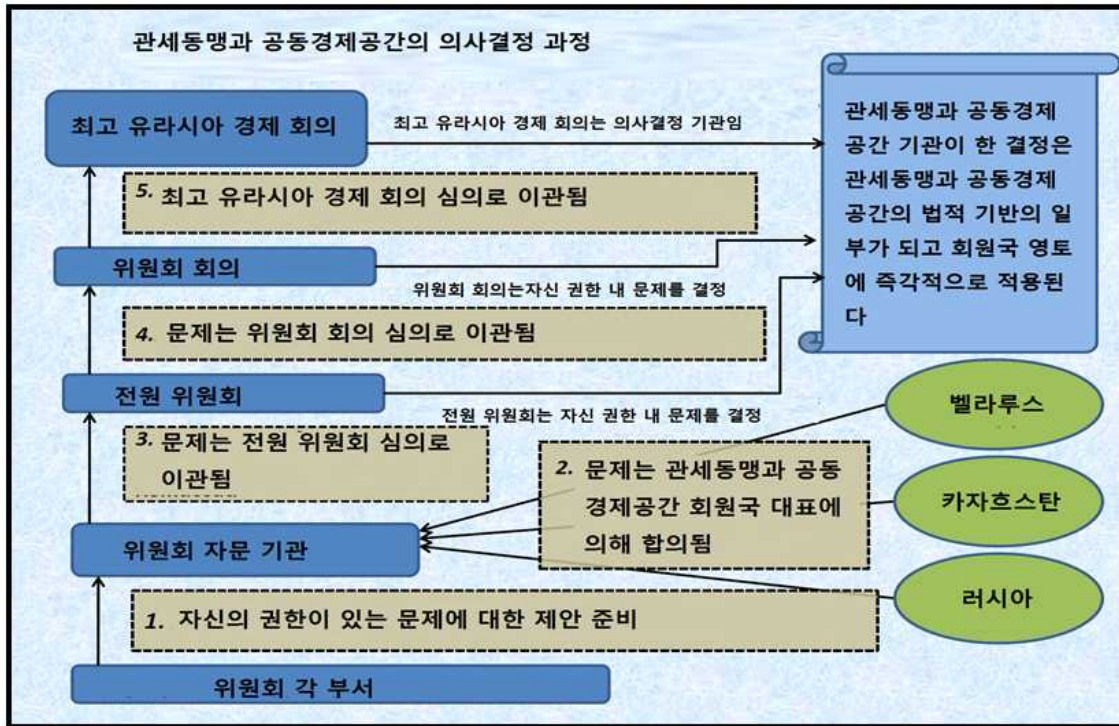
<그림 8>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기구



출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13)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수입관세와 유통, 제 3국과의 무역관계, 거시경제, 경쟁정책, 산업 및 농업 보조금, 에너지정책, 독점, 주 및 지방자치 조달, 서비스 및 투자, 운송, 환율정책, 지적재산권 및 제품, 서비스, 이주노동, 금융시장(은행, 외환시장, 보험, 증권) 등에 권한을 갖는다.

〈그림 9〉 의사결정과정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Eurasian_Economic_Union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전원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가에서 3명씩 선출된다. 9명의 위원은 최고 유라시아경제회의에서 선출되어 4년의 임기를 갖는다.¹⁴⁾ 이들은 각 회원국에서 연방장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전원위원회는 실질적인 집행기구로써 조약이나 예산의 감독 및 집행을 담당한다. 최고유라시아경제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원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다수결제도와 만장일치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위원회 각 부서를 거쳐 자문기관에서 합의를 이룬 뒤 권한에 따라 전원위원회, 경제위원회, 최고 유라시아경제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그 결정은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에 즉각적으로 적용된다. EurAsEC 법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법원으로 바뀔 예정이며 주로 국가 간 법의 해석, 회원국 간의 분쟁 등에 해결을 위한 곳으로 개인의 제소권은 제한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제도적 틀로써 초국가적기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고 유라시아경제 회의의 권한이 강력한 편이며 의회의 역할 부재로, 민주적인 참여가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의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으로 어느 정도 권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거나 불투명하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초국가적기구이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로써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2006년 가시화되어, 관세동맹이 설립되고 2년 만에 단일경제공간이 들어섰으며,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2012년 설립되어 이제 2년이 됐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유럽연합과 같이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14) 전원위원회는 각 국가에서 선출된 3명으로 구성되며, 의장국가의 경우 의장을 포함하여 3명이다.

Ⅲ.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망

1.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식 가입 국가는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이전에 관세동맹에 가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경제 규모는 <표 3>와 같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GDP의 86.7%, 인구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매우 작았으며, 1인당 GDP 역시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는 낮아 경제통합에 있어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그림 10>과 같다.

<표 3> 유라시아경제연합 각 국가의 경제지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GDP(명목)*	2,057.30	77.17	225.61	11.11
1인당 GDP**	14,316	8,195	12,950	3,373
인구	143,499,861	9,466,000	17,037,508	2,97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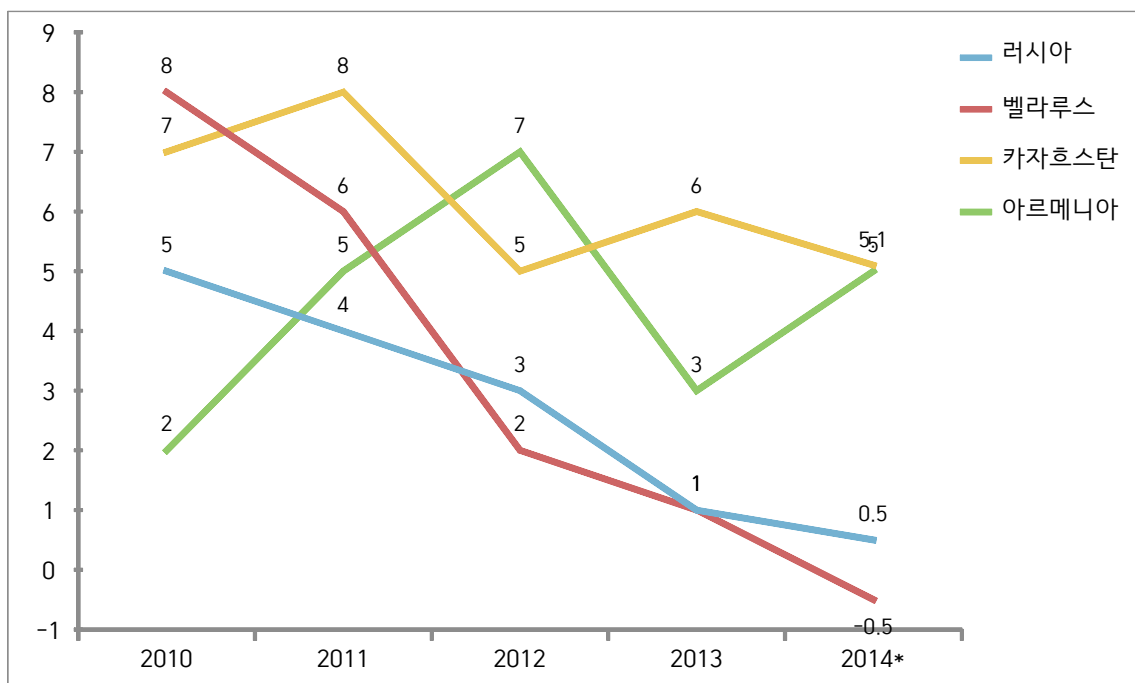
* 단위 10억 달러

** 단위 달러

출처, GDP - IMF 2014 통계

인구 - 세계은행(World Bank) 2013 통계

<그림 10>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출처, 세계은행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다. 셰일가스과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러시아 경제가 0.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15년 전망치를 0%로 전망했다.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2014년 경제성장률이 2013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저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 하락 역시 러시아의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벨라루스는 국가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Belaruskali의 실적 저조와 칼리비료가 하락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어 벨라루스의 경제 역시 저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창설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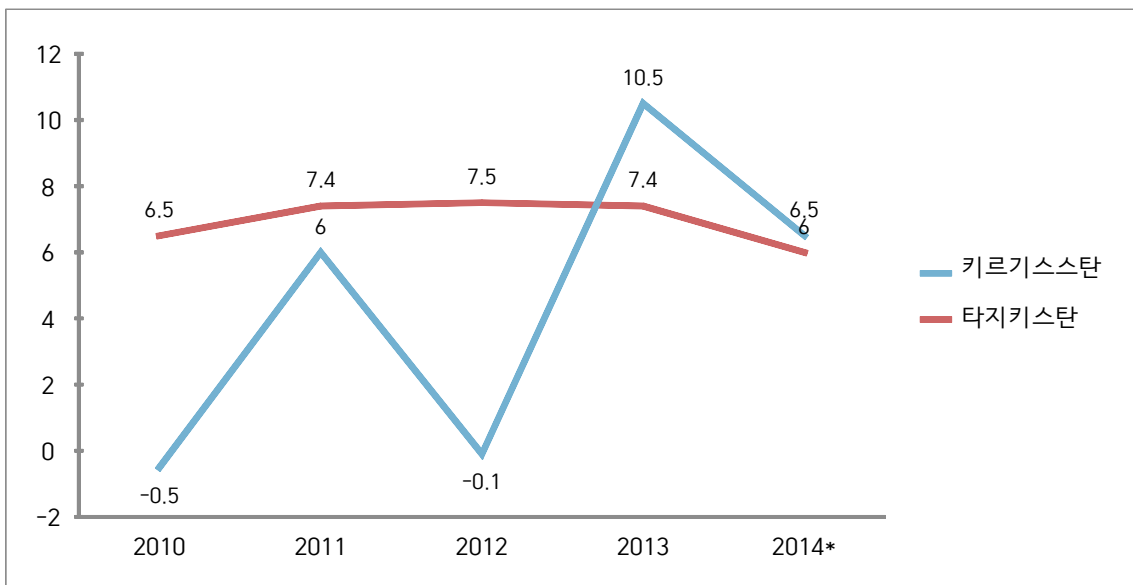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가는 주로 세계경제로 통합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진 국가들로 러시아와의 통합을 통해 물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히 아르메니아의 경우 내륙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를 둘러싸고 있는 터키, 아제르바이잔과 분쟁이 있어 수출입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르메니아로 하여금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을 것이다.

〈표 4〉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제지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GDP(명목)*	7.64	9.15
1인당 GDP**	1,341	1,102
인구	5,719,500	8,207,834

출처, 표 3과 같음

〈그림 11〉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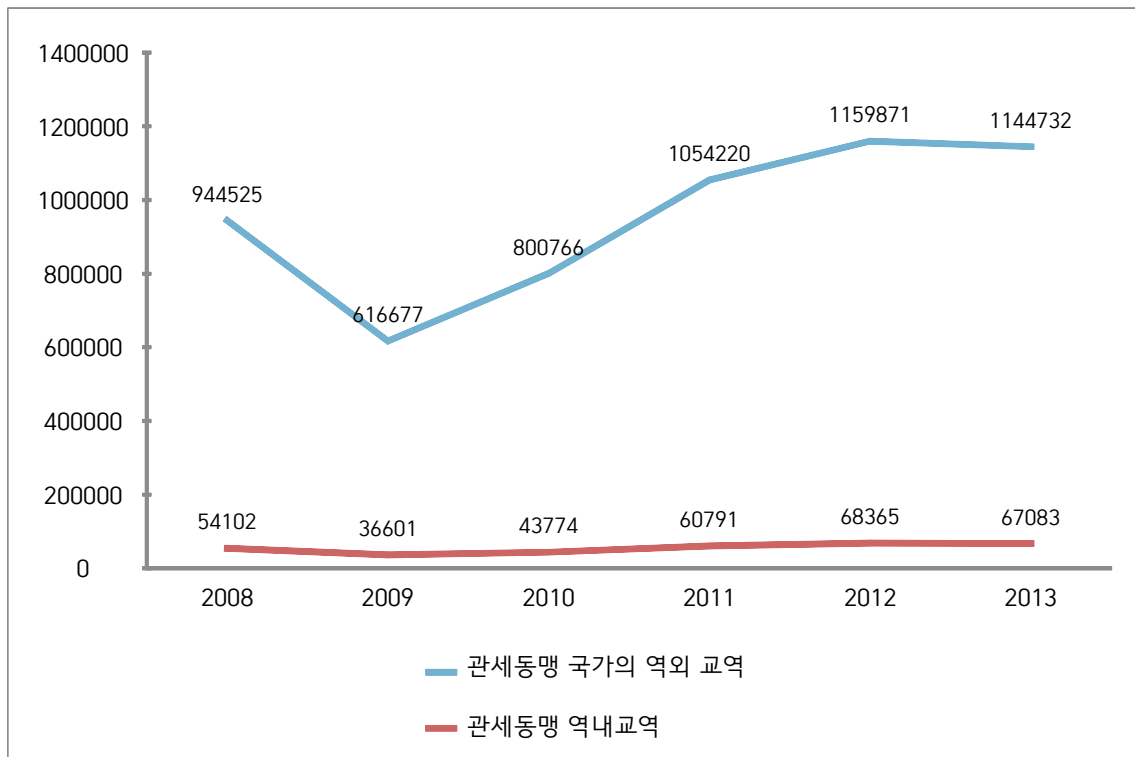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

〈표 4〉는 유라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제 지표이다. 이 두 국가의 상황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보다 심각했다. 또한 두 국가 모두 내륙 국가로 세계경제로의 통합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두 국가의 경제지표를 봤을 때 이들 국가의 가입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제지표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타지키스탄의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국가 역시 아르메니아와 비슷한 이유로 경제연합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2.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성과

관세동맹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교역활성화와 다각화 측면을 봐야한다. 교역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 관세동맹 창설이후 회원국 간 교역량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예산부 산하 국제경제통합국 국장 Yernar Bakenov는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교역량이 2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3년 기준 관세동맹 회원국 간 교역량은 88%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동맹국가의 대 카자흐스탄 수출량은 62% 증가했다고 밝혔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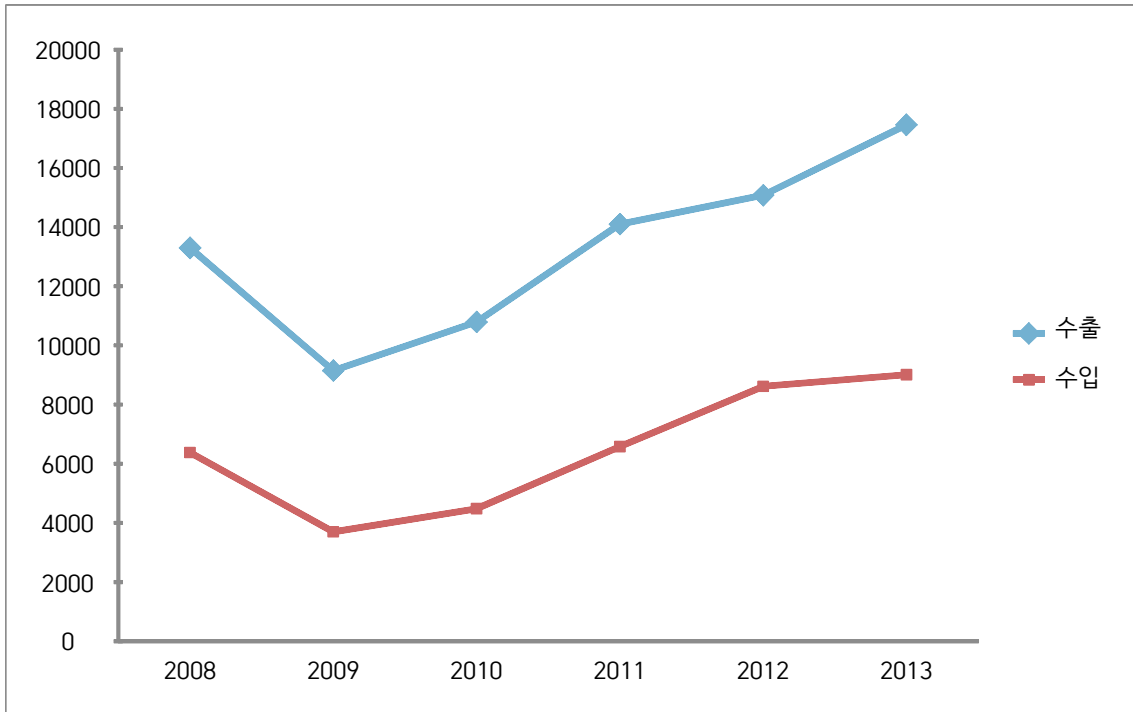
〈그림 12〉 관세동맹 국가의 역외, 역내 교역량



출처, 각 국가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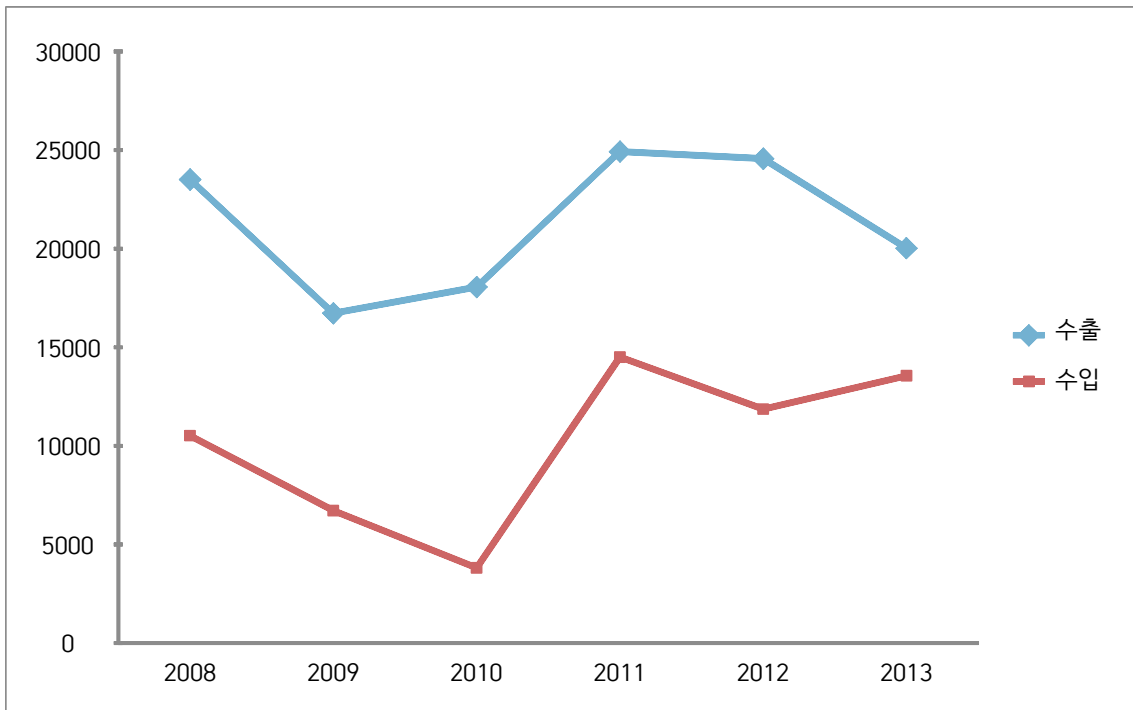
15)Kazakhstan 2050. 2014년 12월 2일. <http://strategy2050.kz/en/news/8536>

〈그림 13〉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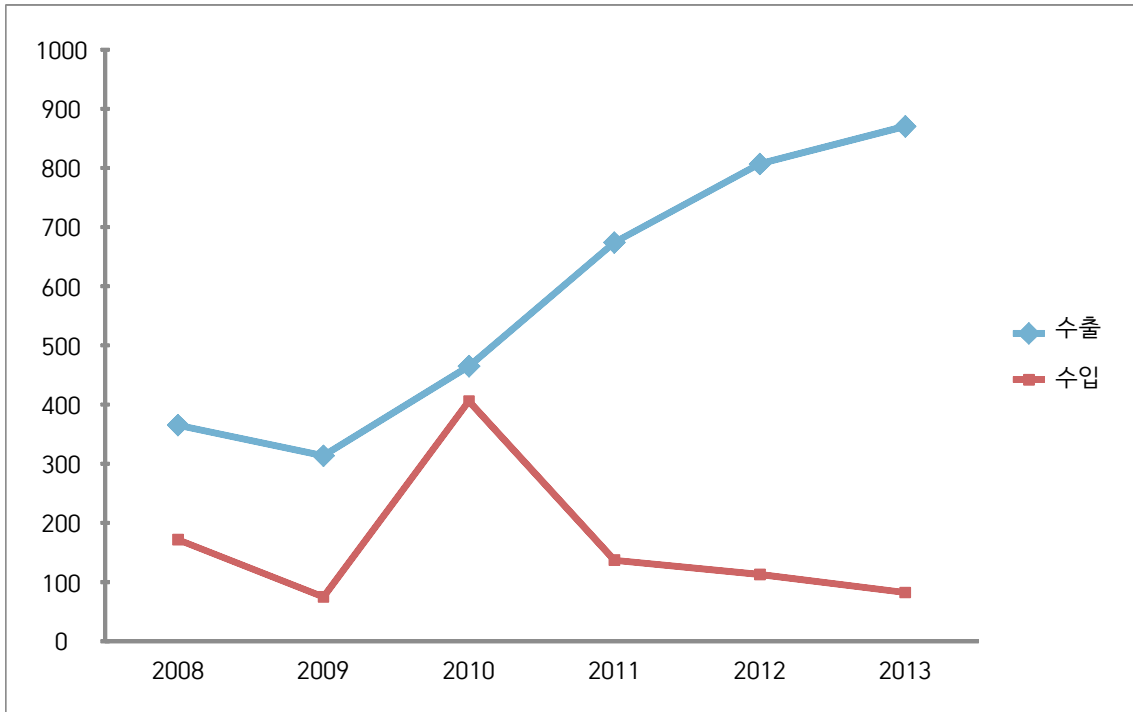
출처, 러시아 통계청

〈그림 14〉 러시아의 대벨라루스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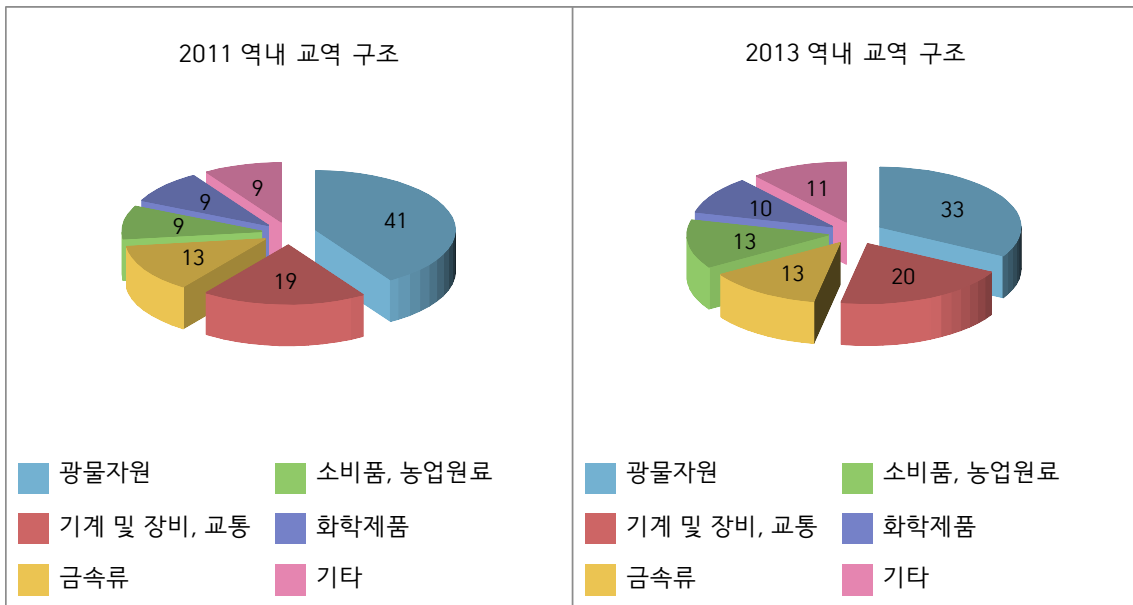
출처, 러시아 통계청

〈그림 15〉 벨라루스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입



출처, 벨라루스 통계청

〈그림 16〉 관세동맹 국가의 역내 교역구조 변화



출처,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하지만 <그림 12>에서 보이듯 여전히 역내 국가 간 무역비중은 5.8%에 불과했으며, 역내 교역비중보다 역외 교역비중이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러시아의 교역에서 역외 교역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81%였으며, 러시아의 교역에서 관세동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1%로 10%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즉 관세동맹은 러시아에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증가했으나,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교역은 매우 작았으며 카자흐스탄의 적자가 커지고 있었다. 카자흐스탄 역시 수출의 대부분이 관세동맹 외 국가였다. 이러한 원인은 관세동맹 국가들은 천연자원 수출국가로 서로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영역이 좁다는 특징에서 기인한다. 즉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을 통해 회원국 간 교역량 성장은 있었지만, 전체 규모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역의 다각화 측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림 16>은 이를 보여준다. 2011년과 2013년 역내 교역 구조의 변화를 보면 광물자원의 비중이 줄고 소비품의 교역이 늘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광물 및 금속, 화학제품이 전체 교역의 60%를 넘는다. 또한 관세동맹의 취지가 취약한 부분의 상호보완을 위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교역의 다각화 측면에서 역시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창설로 오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을 볼 때 관세동맹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관세동맹의 성과가 크지 않았음에도 이미 어느 정도 상호교역이 증가했다는 점을 볼 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으로 단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아르메니아 경제적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르메니아의 참여로 거시적 지표가 크게 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3. 대러제재로 인한 경제적 불투명성

<그림 17> 1 달러 당 루블 환율



출처, <http://www.bloomberg.com/> 검색일 11월 22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대러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700억 규모의 외환보유고와 에너지산업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 초 110달

러 선이던 유가가 현재 7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다.¹⁶⁾ 전체 수출에서 70% 이상을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자재 중에서도 가스 석유의 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그리고 유가의 하락이 시작되면서, <그림 17>과 같이 루블화의 가치가 30%나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9%가 될 것이란 예측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평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는 2015년을 넘기기 힘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더 심각해진다면 디폴트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투자 감소와 수출입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예상되던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해 서방의 예상보다 러시아가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방이 아닌 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오는 5월 중국과 러시아는 410조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베트남과 러시아는 우주분야와 자원분야, 그리고 경제연합과의 FTA를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과의 교역 증대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결성에 합의했다.¹⁷⁾ 그러나 대러제재의 장기화는 러시아뿐 아니라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본 논문을 통해 내년 출범하게 될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구의 분석과 경제적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외형적으로는 이미 경제동맹의 단계를 넘어 완전경제통합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 증거로 유라시아경제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초국가적기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전보다 강력한 강제권을 가지고 회원국가들을 통합시키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법원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과 동시에 유라시아경제연합 법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전 보다 더 강제력을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제도적 틀로써의 초국가기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유럽연합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달리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이제 막 생겨났으며 관세동맹에서부터 단일경제공간, 그리고 2015년 출범할 유라시아경제연합까지 5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시간에 지남에 따라 그 제도적 성격이 정착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주도 국가는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GDP의 86.7%, 인구의 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독일, 프랑스가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주도권과 큰 영향력을 러시아가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의 단극체제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으로 러시아는 더욱 유라시아경제연합이라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명칭에서도 볼 수 있다. 보통 EEU로 표기했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스스로를 EAEU로 표기하며 A를 씌으로써 EurAsia임을 강조한다. 유라시아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EurAsEC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은

16) 2014년 12월 2일 현재 서부 텍사스유의 경우 69달러까지 하락했으며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70달러 선을 유지함

17) 에너지 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8호, 9페이지

통합 바로미터의 결과인 러시아인들의 서구지향적인 모습과는 상반된다. 어쩌면 유럽연합과의 통합을 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율배반적이게도 러시아 국민들은 유럽통합을 원하면서도 유라시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가장 강력하게 유라시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초국가적기구의 설립을 통해 경제동맹의 단계를 넘어 완전경제통합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국가기구로의 권력이양과 예산독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회원국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국의 다수는 독립이후 독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이기에, 초국가기구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회원 국가들이 쉽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로 러시아의 경우 관세동맹 기간인 2013년 벨라루스와 대립했는데, “칼륨전쟁(potassium war)”이라 불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이 때 벨라루스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석유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보복을 했다. 결국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모습은 다른 국가들에게 러시아는 신뢰할 수 없으며, 권위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초국가기구로의 권력이양에 대한 마찰은 유럽연합에서도 존재했으며, 유럽연합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시 이러한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창설로 회원국들이 당장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국가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러시아의 치중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경제적 수준이 낮고 그 격차가 크다. 회원국의 대부분 국가들은 천연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조차 산업다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관세동맹 국가의 역내 교역 비중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역내국가 간 수출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관세동맹에서 회원국 간 교역이 증가하긴 했지만, 각 국가들의 러시아와의 교역만 증대됐을 뿐이었으며, 이런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유럽연합 초기나, 메르코수르의 브라질 사례처럼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일정한 척도를 가지고 통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우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단순히 과거 소련의 독립 국가들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치 척도가 없는 회원국의 확대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질적 수준의 높여줄 수 없을 것이다.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경제통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가입국가의 수보다는 가입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성을 가진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발하지 않았기에 이전에 있었던 관세동맹과 단일경제공간의 성과를 통해 예측하기에 확실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의 경제에 대해 단순히 지표 비교만 있었을 뿐 국가별 경제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상충되는 중국의 ‘신 실크로드’구상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향후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성립되고 이러한 부족부분의 추가연구를 통해 논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병호. “‘유라시아연합’의 정체성과 실현가능성: 향후설립에 따른 정치·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 22권 제 1-1호. 99-132쪽.
- 박지원. “CIS 경제통합에서 러시아의 역할: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구심력”. 「슬라브학보」. 제28권 1호. 109-150쪽.
- 박지원. “유라시아연합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의 대 러시아 경제적 의존에 대한 다면적 분석”. 「HK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 유라시아 지역통합과 유라시아연합(EAU)」. 81-100쪽
- 성원용.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의미: 성과와 그 한계”. 「HK러시아·유라시아연구사업단 - 유라시아 지역통합과 유라시아연합(EAU)」. 2014-6호. 31-44쪽
- 엄구호.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2014 GPAS International Conference」. 81-94쪽.
- 에너지경제연구원.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설립 쟁점과 전망”.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28호.
- 코트라. “유라시아의 새로운 문 ‘유라시아경제연합’”. (검색일: 2014.11.20.)
- EBD. "Integration Barometer 2014". 2014